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개요)

1. 귀가 곤란자 대책의 배경

<피해 예측>

· 2006년 5월 도쿄도가 작성한 ‘수도 직립형 지진에 의한 도쿄의 피해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 도쿄만 북부 지진(M 7.3 규모)이 발생한 경우, 도내에서는 약 448만명의 귀가 곤란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일본 대지진 재해시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실태 조사>

(협의회 실시)

· 도내에서는 약 352만명 귀가 곤란자가 발생한 것을 추정, 당일 16-17시경 회사나 학교를 벗어날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회사(학교) 관리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약 35%)

·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시 귀가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약 50%가 즉시 걸어서 귀가한다고 응답

⇒도민이나 사업자에게 ‘함부로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킨 후, 일제 귀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 3일간 이상 비축하는 기업은 음료수 약 42%, 식료품 약 38%

⇒기업에 있어서의 귀가 곤란자 대책을 보다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2. 수도 직하형 지진 귀가 곤란자 등 대책 협의회

· 방대한 수의 귀가 곤란자 등에 대한 대응은 행정에 의한 ‘공조’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조 및 협조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불가피함.



· 2011년 9월 도쿄도 및 내각부(방재 담당)는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해 국가 관련 부처, 수도권 지방 공공단체, 관련 민간 기업, 단체 등을 구성기관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 각각의 대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과제에 대한 횡단적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3.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1) 일제 귀가 억제에 대해

협의회에서는 재해시 일시 귀가 억제에 대해 도민 및 사업자, 행정의 착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한 ‘일시 귀가 억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책정.

(주요 내용)

· 기업 등 직원의 시설 내 대기

- 시설 내 대기에 필요한 3일치 비축
- 대규모 집객 시설 및 역 등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 학교 등에 있어서의 아동, 학생 등의 안전 확보
- 안부 확인 및 재해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관민일체가 되어
정비

(2) 일시 체류시설 확보

도쿄도는 도청사를 비롯한 도립 시설 및 도쿄도 관련 시설을 일시 체류시설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설 확보의 협력을 요청하여 시설의 양적 확대를 도모한다.

(3) 신속한 안부 확인과 정확한 정보제공 체제

철도 운행 현황 및 안부에 관한 정부제동 체제를 충실히함과 동시에 가족 등과의 안부 확인 수단을 확인하고,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관민일체로 정보통신 기반 정비 및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체제를 확보해 간다.

(4) 귀가 지원

도쿄도는 사업자 및 관련기관 등과 연합, 협동하여 대체 운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도보 귀가자가 귀가할 때 물, 화장실,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재해시 귀가 지원 스테이션 확충 등을 실시한다.

4. 도쿄도의 귀가 곤란자 대책에 관련된 조례 제정

도쿄도는 수도 직하형 지진에 대한 긴박감과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행정, 사업자, 도민 등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귀가 곤란자 대책에 대한 착수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화를 예측한 주요 항목>

- 기업 등 직원의 시설 내 대기 협조를 의무화
- 기업 등 직원을 위한 3일치 비축(음료수, 식료품 등) 협조를 의무화
- 대규모 집객 시설, 역 등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협조를 의무화
- 학교 등에 있어서의 아동, 학생 등의 안전 확보 협조를 의무화
- 관민에 의한 안부 확인과 피해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체제 정비 등
- 일시 체류시설 확보를 위한 도, 국가, 지자체, 민간 사업자의 연합 및 협력
- 귀가 지원(재해시 귀가 지원 스테이션 확보를 위한 연합 및 협력 등)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후 협의회 등에서의 검토를 토대로 행정 지원책과 함께 실시 계획으로서 정리하여, 도민과 사업자에게 권장해 간다.